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moonkim@kipf.re.kr)

Ⅰ. 서론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0대 대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하였고(90~180일→120~240일 증가), 근로장려세제 수급 연령요건이 폐지(2018년 세제개편안)되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정책이 다수 도입(2018년 3.15 청년일자리대책)된 바 있다.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1] 청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각각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단순한 수당정책을 넘어 주거,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서 수많은 정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모든 청년대상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 현금지급성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나 제도 차원의 정책이 더 시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1)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센터(검색일자: 2022년 10월 18일)
제2조(기본이념)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②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③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④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본고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에 대한 향후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책 관련 질문은 보편적 청년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혹자는 현재 이 시대의 청년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맞춤형 정책보다는 보편적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2] 한편, 다른 이들은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 가구의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 기간을 늘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 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3]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편적 청년지원으로는 실질적인 금액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정책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청년의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질문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분석방법

본고의 기본적인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근로시간, 교육수준(범주형), 교육기간(총연도), 비정규직(자기선언적, 노사정위원회, ILO 버전 등) 등의 정의 방법은 노동패널조사 웹페이지의 '데이터활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4]

패널자료의 표본손실(attrition) 우려 때문에 패널조사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청년의 월급여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 혹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분석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노동패널조사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5), 6)]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 결과물인 월급여에 대한 불평등지수의 시간추세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최저임금에 맞춘 고정된 시급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2) 2022년 5월 17일자 UNN 기사에서는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비판적 요소로 지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보편적인 소득지원(생계지원)을 강조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 2021. 8. 25.,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71583, 검색일자: 2022. 8. 16., 『한국대학신문(UNN)』,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정책, 보편성 부족.정책효과도 '의문'」, 2022. 5. 1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33, 검색일자: 2022. 8. 16.).

3) 『서울경제』, 「쏟아지는 청년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2022. 1. 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02CKK2G, 검색일자: 2022. 8. 16.

4)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활용」,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113&key=531, 검색일자: 2022. 7. 25.

5) 적어도 횡단면적인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에 기반한 청년의 소득분포 추세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소득분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향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6) 초안에는 부모의 소득과 청년 소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포함하였으나, 논의의 초점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재정포럼 원고에 싣지 않았음을 밝힌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청년 간 노동시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임의적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고려하였다.

살펴볼 때, 시간당 임금 대신 월급여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월급여를 기반으로 청년의 소득분포를 분석한다. 단, 청년 간 경제활동 진입에의 격차까지 아우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취업 중인 청년들에 한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간 청년들의 임금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띤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경제활동참여 수준에서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청년 간 노동시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의적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고려하였다.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의 값을 갖는 변수로 정의되었다.[7)]

분석에서 제시될 주요 통계량은 불평등지수인데, 불평등지수로는 표준편차(SD)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한다.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불평등 대신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니계수를 불평등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만큼 본고에서는 격차지수보다는 불평등지수라는 더 상용화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불평등지수 자체가 노동시장의 차별의 결과라거나, 모든 불평등의 수준이 없어지는 '평등'상태가 바람직하거나, 현재의 불평등 상태가 개인의 선택을 모두 벗어난 것 등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Ⅲ. 분석 결과

1. 청년의 월급여의 평균과 불평등지수

먼저 청년을 25~39세로 정의하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급여,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을 [그림 1]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

7) 이때 상정된 숫자는 연구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그 수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경제활동 중인 청년의 인구도 감안하여 청년의 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간단한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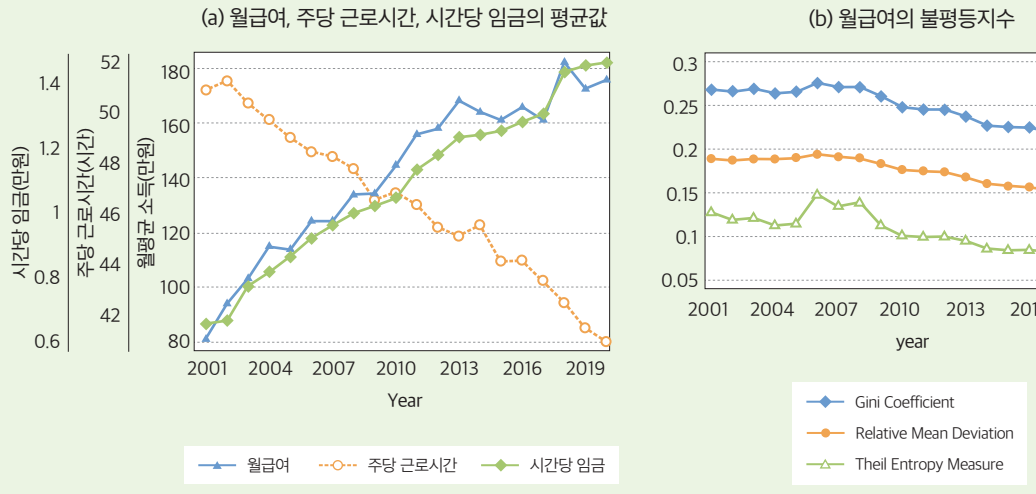
간은 대체로 감소하되, 2001~2002년과 2013~2014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2017~2018년에 크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월급여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2018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에 2019년 감소, 2020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같은 기간 월급여에 대한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려보면 [그림 1]의 (b)와 같다. 해당 그림의 위에서 순서대로 Gini Coefficient, Relative Mean Deviation, Theil Entropy Measure지표와 관련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을 포함한 2006~2008년 기간과 2017~2018년 기간의 경우에는 불평등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Theil Entropy Measure는 2006~2008년 기간에 그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7~2018년 기간의 경우, 불평등지수는 소폭 증가하고 이후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는

월급여에 대한 동기간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을 포함한 2006~2008년 기간과 2017~2018년 기간에 불평등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청년층(25~39세)의 노동시장 결과물: 평균과 불평등지수

(단위: 만원, 시간, 지수)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기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청년층의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임금 증가율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최근 2018~2020년 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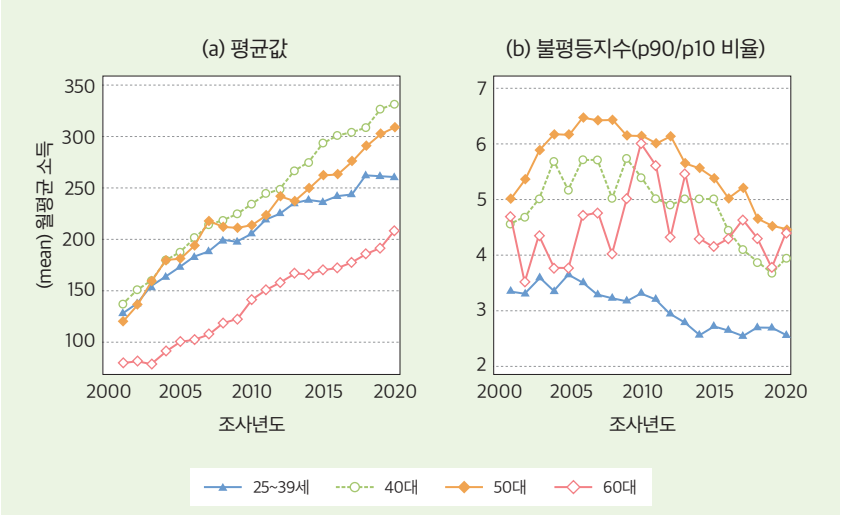
3개의 지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8)]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의 월급여의 수준과 불평등지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다른 연령대의 월급여 불평등지수는 악화되는 반면 청년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층(25~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의 월급여 평균값과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그림 2]에 제시해보았다.

먼저, 월급여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평균값이 2001년 기준 130만~150만원 구간에 속하는 데 비해 월급여 평균값이 100만원 미만으로 현저히 낮다. 임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임금 증가율은 분석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 임금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현저히 둔화되었다. 그 결과, 40대와의 월급여 격차가 글로벌 금

[그림 2] 연령대별 월급여 평균과 불평등지수

(단위: 만원, 비율)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조사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래프를 생산함
2. 만 25~69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본에 한정하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3. (a)는 평균 월급여를, (b)는 각 연령집단 내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를 2001~2020년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음 (b)의 불평등지수는 하위 10분위 대비 상위 10분위(90분위)의 비율로 정의되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기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8) 가계동향조사자료 2인 이상 도시 가구 자료에 기반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성명재(2016)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융위기 이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고, 최근 2020년에서야 그 간극이 다소 좁혀졌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청년층이다. 청년층과 40~50대 간의 월급여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임금 증가율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최근 2018~2020년 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청년층의 월급여는 60대의 월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림 2]의 (b)에서는 연령대별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지수는 10분위 대비 90분위 월급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는 각 연령대별로 표본을 분리하고, 각 표본을 월급여 기준으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여 하위 10%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치를 비교한 값이다. 정의상 상위 10%의 월급여가 하위 10%의 월급여보다 크므로 p90/p10로 정의된 불평등지수 계수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데, 임금격차가 클수록 1보다 더 큰 수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60대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체로 감소한다.[9] 이러한 월급여의 불평등지수의 역U자형 패턴은 40대와 50대에서도 관찰된다. 특히 임금의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둔화된 50대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불평등지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의 수준이 애당초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청년층은 앞서 [그림 1]의 (b)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1~2020년의 분석기간 동안 임금의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불평등지수가 뚜렷하게 낮게 형성되었다. 만약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단순 해석한다면, 청년의 임금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해석은 합당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불평등지수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의 수준이 애당초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청년 임금불평등 지수의 감소 추세에 대한 해석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그것을

9) 60대의 불평등지수는 연도별로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60대 임금근로자의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10분위와 90분위의 값이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층은 임금 상승률과 불평등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상위 분위 이상의 임금의 상승률이 청년층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릴 만큼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상쇄할 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월급여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청년의 월급여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최근 60대 이상 고령자의 임금 증가율이 크게 올라, 60대의 임금 수준이 청년의 임금 수준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살펴보자. 다른 연령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불평등지수가 높아졌다가 그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청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근까지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불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을 단순히 긍정적인 지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단순한 해석을 지양하고,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줄어드는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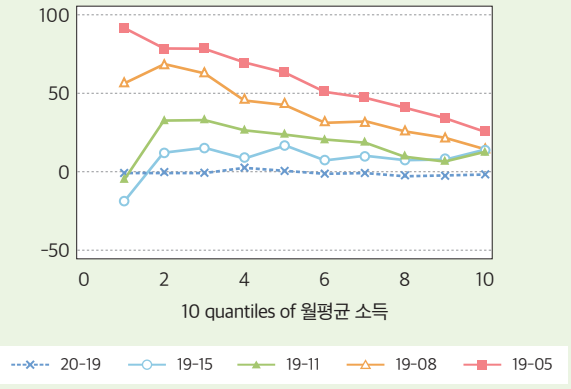
가. 분위별 임금 상승률

청년층은 임금 상승률과 불평등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상위 분위 이상의 임금 상승률이 청년층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릴 만큼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상위 임금의 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중하위 분위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청년층 전체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불평등지수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3]에서는 청년층(25~39세)의 월급여의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각 연도별로 청년들의 월급여를 10개의 분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특정 2개 연도에 대한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 점선 표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각 분위 구간의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이다. [그림 1]이나 [그림 2]에서는 청년층의 임금 평균값이 2019~2020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림 3]에서도 모든 분위구간에서 임금 상승률이 사실상 0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나머지 그래프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과거연도 대비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맨 위부터 순서대로 2005년, 2008년, 2011년, 2015년의 각 연도 대비 2019년의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2005년 대비 2019년 분위평균값의 상승률이 월급여가 낮을수록(분위가 낮아질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분위의 월급여도 상승하지만, 이는 하위 분위보다 그 상승폭이 적다. 2008년 대비 2019년,

[그림 3] 청년층(25~39세)의 월급여의 분위별 임금 상승률

(단위: %)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림 3]의 그래프는 2019년과 다른 시점 간 월급여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그래프의 "19-X"라는 표시는 max(2019, X)연도 대비 min(2019, X) 연도 기간의 임금 상승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19년 이전의 시기의 X연도의 경우 임금 상승률은 {(2019년 월급여-X시점 월급여)/(X시점 월급여)}*100%로 정의되었음
4. 분위별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연도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하였고, 해당 분위의 평균임금값을 계산하였음. 이러한 각 연도 분위별 평균임금값을 이용하여 전술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함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2011년 대비 2019년 그래프에서도 1분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추세가 포착된다. 연도에 따라 최고 분위의 임금 증가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분위의 임금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임금 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반면 1분위의 분위평균값은 2008년 이후에 2분위 분위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심지어 2019년의 1분위 분위평균값이 2011년이나 2015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컨대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가 점차 감소한 것은(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월급여 상승률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감소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양방향에서 평균에 수렴하는 청년의 임금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양방향에서 평균에 수렴하는 청년의 임금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청년의 숙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진된 결과 하위 분위의 청년의 임금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

나. 요인별 월급여의 수익률 및 불평등지수 기여도

상위 분위의 청년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직관적인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교육의 수익률이 분석기간 동안 변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청년의 숙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진된 결과 하위 분위의 청년 임금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10] 한편, 일반균형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을 취득한 인력의 풍부한 공급은 고등교육의 임금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풍부한 고등교육 인재의 공급으로 인하여 숙련편향 기술이 고숙련 노동에의 수요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위 분위 청년의 임금 상승률은 예전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데이터로도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월급여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 직종, 업종, 이중노동시장 등의 대표적인 임금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방정식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다. 각 요인의 수익률이 시간의 추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두번째 분석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월급여 불평등지수에 대한 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도출한다.[11] 본 연구에서 임금방정식의 추정 및 임금결정 요인에 대한 측정은 간단한 기초 분석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정교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설득력 있는 결과를 추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정형적 사실을 구축하는 것이 본 절의 주요 목표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 분석 방법 개관

첫째,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임금방정식을 추정한다. 이때는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는데, 이는 경력(work experiences)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때 다양한 생애주기에 위치한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OLS 회귀분석을 고려하였고, 구체적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log Y_j = {} & \beta_0 + \beta_{Edu} HE_j + \beta_{W,1} E_j + \beta_{W,2} E_j^2 + \beta_{IR,1} IR_j + \beta_{IR,2} SF_j \\ & + \beta_{ID,1} ID_j^{ICT} + \beta_{ID,2} ID_j^{FIN} + \beta_{ID,3} ID_j^{MAF} \\ & + \beta_{OCC,1} OCC_j^{M.PS} + \beta_{OCC,2} OCC_j^{OFS} + \beta_{REG} MTR_j + u_j\end{aligned} \quad \text{식 (1)}$$

10) 최저임금 제도로 하위 분위의 임금 상승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 원천소득별 지니계수를 요인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Lerman and Yitzhaki(1985), Stark et al.(198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j는 개별 경제활동 주체를 의미한다. Y_j는 j의 월급여를 의미하며,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한다. HE_j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E_j는 경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졸업 여부 정보를 가지고 교육연수를 계산한 후 만 나이에서 '교육연수+7'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12] IR_j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13] SF_j는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IR,1} IR_j + \beta_{IR,2} SF_j$는 이중노동시장 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D_j^{ICT}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ID_j^{FIN}과 ID_j^{MAF}는 각각 금융업과 제조업에 대하여 유사하게 정의된 더미변수이다. $\beta_{ID,1} ID_j^{ICT} + \beta_{ID,2} ID_j^{FIN} + \beta_{ID,3} ID_j^{MAF}$는 업종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OCC_j^{M,PF}$는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OCC_j^{OFS}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OCC,1} OCC_j^{M,PF} + \beta_{OCC,2} OCC_j^{OFS}$는 직종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MTR_j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beta_{REG} MTR_j$는 지역요인을 포착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u_j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으로 가정한다.

둘째,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월급여 로그값의 요인별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인별 변수의 값(HE_j, E_j 등)과 추정계수(β_{HE}, $\beta_{E,1}$, $\beta_{E,2}$ 등)을 곱하고 상위 항목(이중노동시장, 교육, 업종, 직종 등)별로 취합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위항목의 추정값은 '월급여 로그값'에 일종의 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천소득별로 지니계수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별 월급여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각 특질변수의 계수는 추정된 계수로, 개인별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도 내 월급여의 불평등은 특질변수의 개인간 이질성에만 기인한다. 반면 연도 간 월급여의 불평등은 개인 간 특질변수의 이질적 분포뿐 아니라 요인별 수익률의 시계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2) 임금방정식 회귀분석의 연도별 추정 결과

먼저 [그림 4]의 개인별 자원변수의 평균값과 추정계수의 시간추세를 검토한다.

연도 내 월급여의 불평등은 특질변수의 개인 간 이질성에만 기인하는 반면, 연도 간 월급여의 불평등은 개인 간 특질변수의 이질적 분포뿐 아니라 요인별 수익률의 시계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12) 7년을 추가적으로 제한 것은 초등학교 직전까지의 기간이 경력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종사상지위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정의를 사용하였다.

노동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하면 고등교육 수익률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하면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점선으로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의 (b)는 경력의 평균값과 수익률의 추세를 보여준다. '경력' 변수는 만 나이에서 교육연수에 7을 더한 합계액을 제하여 계산되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경력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청년층의 경력 평균값도 시간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경력의 평균값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률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직관적인 현상은 경력이 실제 경력이 아니라, 대리변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취업으로 인한 경력이 아닐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비경제활동기간, 실업기간, 학원 등 훈련기간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 및 30인 미만 취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검토한다. 비정규직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의 경우 연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값 및 계수 모두 일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15년 이후 그 평균값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계수의 절댓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크게 증가(페널티 강화)했다가 축소되었는데, 2014년부터 다시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의 (e)~(f)에서는 통신인터넷산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할 확률과 각각의 시장수익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그 수익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2018~2020년 기간에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인터넷산업 종사자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며, 수익률 역시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직종의 경우 관리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층 비율이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직종의 상대적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그 하락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큰 폭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직의 경우는 그 비율 및 관련 수익률의 변화는 최근 10년간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림 4] 주요 요인별 시간추세: 평균값과 수익률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림 4]는 월급여에 대한 주요 요인별로 해당 요인의 평균값과 회귀식의 계수값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단 직종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직종 더미변수(관리·전문직 변수와 사무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하여 평균값을 (g)에, 회귀식 계수는 (h)에 제시함
4. 회귀식 계수는 월급여를 종속변수로 하고 (a)~(h)에서 제시된 요인을 설명변수로 취하는 식 (1)의 회귀식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임금프리미엄 취득수단의 보편화로 청년층의 하위 임금이 상승한 반면, 임금프리미엄의 감소로 청년층의 상위 임금의 상승률이 감소한 결과 월급여의 평균값은 정체되고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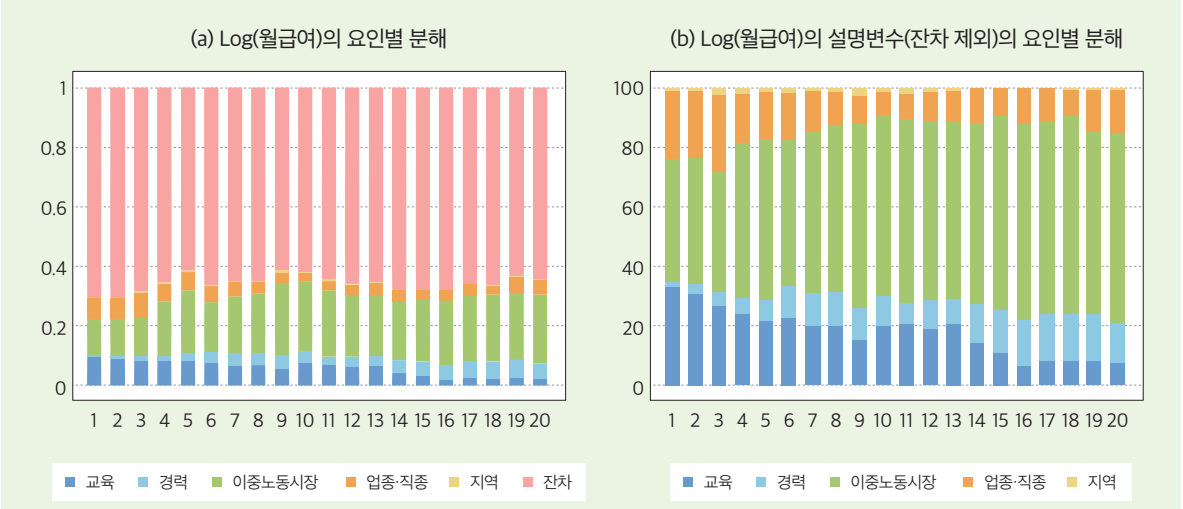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직 비율은 정체되어 있으나 그 수익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 혹은 [그림 2]에서 이미 확인한 청년층의 월급여의 평균과 불평등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임금프리미엄 취득수단의 보편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하위 임금 수준이 상승한 반면, 임금프리미엄 자체의 감소로 청년층의 상위 임금의 상승률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월급여의 평균값은 정체되고, 월급여의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요인분해의 연도별 변화

[그림 5]에서는 청년층(25~39세)의 Log(월급여의) 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변화

[그림 5] Log(월급여)의 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변화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만 25~39세 표본 중에서 취업 중이면서 월급여 소득 정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정함
3. 식 (1)에 의하면 $\log(\text{월급여}_j) = \sum_k \widehat{\beta_k} X_{kj} + \widehat{e_j}$ (k는 결정요인을 의미함)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log(\text{월급여}_j)$에 지니계수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연도별로 수행함
4. 가독성을 위하여 주요 요인은 '기업 규모, 정규직 형태'와 관련된 결과를 묶어 '이중노동시장'으로,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결과를 묶어 '업종·직종'으로 묶어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5. (a)에서는 설명변수와 잔차에 의한 지니계수 기여도를 모두 보여주는 반면(합계 100%), (b)에서는 잔차를 제외한 설명변수에 의한 기여도를 100%로 상정한 후 각 설명변수의 지니계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를 보여주고, 잔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로 상정한 후 고려한 설명변수의 기여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임금결정 요인이 아닌 비관측 요인(unobservables)에 의한 임금불평등 지수 기여도가 대체로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비중은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15년까지 감소한 후, 최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중노동시장(비정규직 및 30인 미만 기업 종사)의 임금불평등 지수의 절대적 기여도는 2001~2010년 기간 동안 확대된 이후 2011~2020년 기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설명변수 전체 기여도 내에서는 상대적인 기여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고등교육 취득 여부로 인한 절대적 기여도 및 상대적 기여도가 2001~2020년 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기간 경력에 의한 임금불평등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2020년 기간 교육요인이 임금불평등 지수에 기여하는 수준은 지역요인 다음으로 낮다. 넷째, 직종과 업종에 의한 기여도는 2001~2005년 기간에 가장 컸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및 그 이후의 회복기간 동안에 줄어들었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섯째, 지역(수도권 거주 여부) 변수는 상대적, 절대적 측면에서 모두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임금방정식의 결과와 연관지어 검토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청년의 불평등 수준에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초기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데이터 패턴과도 일치한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상위분위 임금이 낮아지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하위 분위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력요인의 경우 평균값과 수익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그림 4]의 (b)),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금불평등 지수가 연도별로 계산되었고, 모든 청년들이 해당 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경력의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곧 청년들의 경력 분포가 상당히 이질적임을 함의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정규교육 이후 노동시장에의 이행 과정이 개별 청년마다 특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등교육 취득 여부로 인한 절대적 기여도 및 상대적 기여도가 2001~2020년 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기간 경력에 의한 임금불평등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측면의 이중적 노동시장 특징과, 비경제활동인구-실업-취업이라는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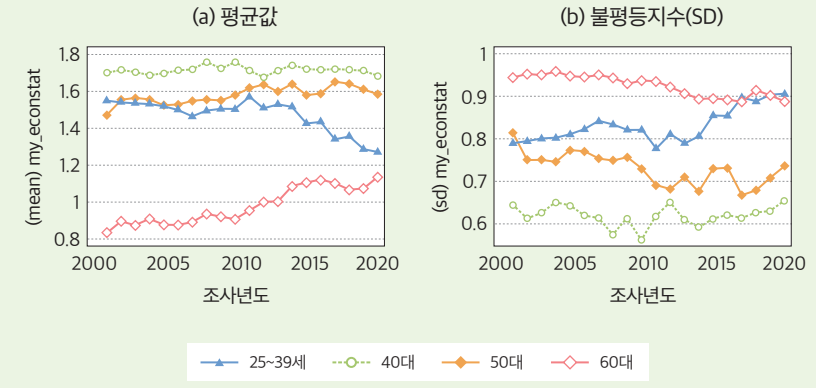
다.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

청년 월급여의 불평등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불평등 지수의 추세에 대한 해석 외에도, 임금불평등 지수는 그 지표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생성된 지표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0,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의 값을 부여하였다.[14]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측면의 이중적 노동시장의 특징과, 비경제활동인구-실업-취업이라는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남성에 한정하여 연령구간별 노동시장참여지표의 연도별 평균

[그림 6] 청년층의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남성)

(단위: 만원, 비율)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간주하고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표본으로 각 연도 만 25~39세에 해당하는 남성을 모두 포함하되, 취업활동을 하지만 월급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였음
3.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2,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1, 실업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인 경우 0으로 정의하였음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도 원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14) 임금 수준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거나 비정규직/정규직 특질 외에 기업의 규모 특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값과 불평등지수(표준편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참여지표의 평균값을 살펴보자. 청년층(25~39세)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노동시장참여지표가 대체로,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50대의 경우 2014년까지는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고, 그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다. 40대의 경우 중간 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2000년 대비 그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 60대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지표의 증가세가 가장 여실히 나타난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노동시장참여지표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참여지표의 불평등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01~2010년 기간에 다소 하락했다가 2017~2020년 기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과 40대의 경우, 해당 기간 임금불평등 지수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비록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본고에 싣지는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지표는 증가하는 반면 불평등지수는 개선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혼인, 출산의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남성에 비해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노동시장 자체의 분석으로 그 패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요컨대, 취업-미취업 및 이중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살펴본 결과 남성 청년층의 경우 해당 지표의 평균값은 낮아지고(취업여건의 악화를 의미), 불평등지수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비록 여성 청년층까지 포함한 전체 표본을 기반으로 수행한 분석은 아니지만) 노동시장 진입장벽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 불평등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15)]

Ⅳ. 결론 및 정책함의

본고에서는 2001~2020년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월급여 평균과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청년층 임금불평등 지수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조준대상 및 정책기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간, 수당 및

청년층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노동시장참여지표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2015~2019년 패널을 이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격차를 연구한 이주미·김태완(2022)에서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8년 이후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본고의 노동시장참여지표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림 6]의 (a)의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승윤 외(2017)에서는 고용관계, 소득, 사회보험의 세 가지 측면의 고용불안정성을 2002~2014년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매우 불안정함과 전혀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니트족 등도 포함한다는 점과 취업인구를 넘어서는 집단에 대한 불평등 연구라는 점에서 본 절의 분석과 맥락이 동일하나, 전혀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비임금 측면까지 고려한 청년의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실제로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수당 기제 간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반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예상과는 달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온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인식과의 간극이 상당히 큰 바, 본고에서는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시도하였다. 첫째, 임금 상승률의 추세를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하위 분위의 임금이 상위를 따라잡는 방식으로 임금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향평준화'인지, 상위 분위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하향평준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교육, 경력, 직종, 업종, 이중노동시장 등의 주요 요인별로 로그임금에 대한 수익률과 지니계수 기여도를 2001~2020년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의 불평등지수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의 원인을 짐작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새롭게 정의하여 이 지표의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는 임금불평등 지수가 취업시장에 이미 진입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는 것처럼 나온 것이 혹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 상의 불평등 요인을 누락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및 관련 해석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2019년 기간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검토한 결과(1분위를 제외한 경우) 분위가 높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분위의 경우는 분석 기간 초반에 상당한 임금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점차 정체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0년 기간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RMF분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분석기간 초반에는 하위분위의 임금이 상위 임금을 따라잡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위분위의 임금 상승률이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률까지도 정체되는 경향성은 청년 노동시장이 성장력을 잃고 노동생산성에

상관없는 일정수준의 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둘째, 로그임금 수익률과 불평등지수 기여도를 주요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의 임금수익률이 분석기간 크게 줄어들었고, 로그임금의 불평등지수에의 기여도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력 및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여부와 관련된 요인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지수의 경우, 직종이나 업종 요인의 절대적 기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경력 요인의 절대적 기여도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노동시장 요인은 관측된 변수(observables) 간 상대적 기여도가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방식 및 요인분해 분석 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지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는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면서, 첫 번째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학졸업자의 양적공급이 늘면서 교육의 임금수익률이 악화된 반면, 평균적인 학력은 끌어올려졌다. 이러한 고등교육 임금에의 영향 메커니즘이 상위 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반면 하위 분위의 임금은 크게 상승하여 청년의 임금불평등 지수가 낮아지게 된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셋째, 남성 청년층에 국한하여 노동시장참여지표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참여지표의 평균값은 하락하고, 불평등지수는 최근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자만을 고려한 임금불평등 지수가 시간흐름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과 상반되는 결과다. 본고에서는 미취업자는 0, 비정규직 취업자는 1, 정규직 취업자는 2의 값을 단순하게 부여한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지표를 고안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표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적어도 노동시장 진입에의 불평등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결국,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에 따라 낮아졌지만 전술한 세 가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것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징후로 단순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정책방향이

분석 결과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시간에 따라 낮아졌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징후로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인 정책방향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어느 한쪽보다는 현금성 지원은 청년취약계층을 조준하고 비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책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해 특정 청년계층만 지원하기에는 청년층이 맞닥뜨리는 노동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 전통적인 임금프리미엄의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늘날, 청년층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일부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청년대상 보편적 현금지원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조준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보편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한다 하여도 그러한 현금성 지원이 노동수요(기업) 차원의 문제 등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은 청년취약계층을 조준하고, 비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책대상을 현재보다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본 분석의 내용이 실제 현실을 적절히 포착했다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 정책함의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에게 노동생산성에 걸맞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인턴 및 훈련생 제도는 미숙련 취업자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제도하에서 청년이 일반 취업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동시에 고등교육을 취득한 청년의 인적자본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숙련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일자리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장과 원활한 시장진입 및 퇴출을 지원하는 산업정책부터, 기업이 고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훈련 정책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일정한 비전하에서 맞물려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공급 정책을 넘어 노동수요 차원의 정책이 '일자리정책'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대학졸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임금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져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숙련편향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이론이 그렇게 제안된 이론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고숙련 노동공급이 풍부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려는 노동수요가 더욱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임금수준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을 주면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체가 많아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고등교육 공급수준이 이미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업체가 많아진다면, 청년층 내 임금불평등 지수는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은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의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시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숙련을 내실 있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물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 취득은 필수적인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대두될 것이며, 그러한 인적자본은 비단 학교나 학원을 다녀야만 취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어떤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직접 파악하고, 협업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경험이 필수적일 수 있다.

청년층이 고등교육 진학, 노동시장 신규진입, 혼인, 출산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주하는 것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함의를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임금불평등 지수의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보고자 시도한 본고의 내용 역시, 청년 노동시장에 내재된 복잡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의 설계는 다양한 분석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여러 연구에 밑바탕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본 분석 결과는 노동패널조사라는 단일 자료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에 정의된 변수의 개념도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그임금의 요인분해나 노동시장참여지표는 각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양극화 문제를 통상적으로 논의할 때, 청년의 근로소득뿐만 아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의 설계는 다양한 분석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여러 연구에 밑바탕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청년의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때 부모의 소득 수준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당 추세를 임금불평등 지수 추세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니라 청년의 금융자산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자산 수준까지도 포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불평등지수'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당 추세를 임금불평등 지수의 추세와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KiPF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입법 예고」, 2017. 12. 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47, 검색일자: 2022. 8. 10.

노혜진,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제38집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p. 71~102.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2016, pp. 1~79.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4권, 2017, pp. 487~521.

이주미·김태완,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pp. 8~20.

Lerman, R. I., and S. Yitzhaki,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985, pp. 151~156.

Stark, O., J. E. Taylor, and S. Yitzhaki, "Remittances and inequality," *Economic Journal*, 96, 1986, pp. 722~740.

『서울경제』, 「쏟아지는 청년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2022. 1. 25., https://www.sedaily.com/News- View/26102CKK2G, 검색일자: 2022. 8. 16.

서울특별시, 「내손안에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 2021. 8. 25., https://opengov.seoul. go.kr/mediahub/23571583, 검색일자: 2022. 8. 16.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2020년 각 연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s/contents.do?key=168

『한국대학신문』,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정책, 보편성 부족·정책효과도 '의문'」, 2022. 5. 1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33, 검색일자: 2022. 8. 16.